

‘국세 61조’... 전년대비 3조 증가 소득세 2.7조·법인세 7000억 ↑

기재부, ‘2월 국세수입 현황’

올해 2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2조9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세수실적 ‘속도’는 30조 원 넘는 규모의 세수입 부족을 기록한 지난해 1~2월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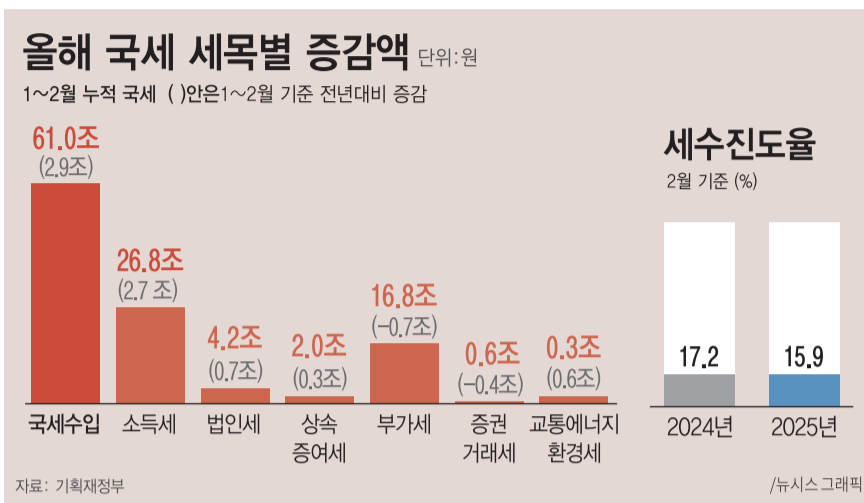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2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2월 국세수입은 14조3000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12조1000억 원)보다 2조3000억 원(18.6%) 증가했다.

소득세 세수입은 13조2000억 원으로 2조 원(18.2%) 증가했다.

성과급 지급 확대, 주택거래량 상승에 따른 근로·양도소득세 증가 등의 영향이다. 법인세는 1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상속세·증여세(1조2000억 원)는 사망자 수 증가에 따라 3000억 원 증가했다.

반면 증권거래세(3000억 원)는 거래량 감소 등에 따라 3000억 원 감소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1조 원)는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 환원에 따라 1000억 원 늘었고 관세(5000억 원)도 1000억 원 증가했다.

올해 1~2월 누적 국세수입은 61조 원으로 전년 동기(58조 원) 대비 2조9000억 원(5.1%) 늘었다.



성과급·주택거래로 소득세 늘고 법인세 실적개선에 증가세 유지

1~2월 세수 진도율은 15.9%
작년보다 낮아 결손 우려 여전
예산 늘었지만 세수 속도 둔화

지난해와 비교해 소득세(26조8000억 원)는 2조7000억 원, 법인세(4조2000억 원)는 7000억 원, 교통세(2조1000억 원)는 3000억 원, 상속증여세(2조 원)는 3000억 원씩 세수가 늘었다. 반면, 부가가치세(16조8000억 원)는 7000억 원, 증권거래세(6000억 원)는 4000억 원 세수 실적이 감소했다.

한편, 전체 국세 수입 예산에서 현재

까지 걸린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오히려 낮아졌다. 올해 2월 까지 세수 진도율은 15.9%를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진도율(17.2%)과 최근 5년 평균(16.8%)에 비해 낮은 수치다.

이는 1년 전보다 세금이 더 걸렸더라도 세입 예산이 증가한 만큼 늘지는 않았다는 의미다. 2024년 367조3000억 원 수준이던 국세수입 예산은 2025년에는 382조4000억 원으로 4.1% 늘었다.

이에 따라 재작성년과 작년 등 2년째 이어진 ‘세수 결손’이 올해도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2월까지 세수 실적만으로 올해 세수 전체를 속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콘텐츠제작전문가 응시자 5년새 2.6배 ↑

산업인력공단, 1분기 ‘자격Q’ 발간

국가기술자격인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응시인원이 5년 전보다 약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처리기사’ 필시시험에도 최근 5년 내 최다 인원이 응시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분기 국가기술자격 정보집 ‘자격Q’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자격Q에는 정보관리6개 종목, 사무자동화2개 종목, 콘텐츠 제작1개 종목 분야 종목별 기초정보와 응시 및 취득 통계, 수험자 통계, 진로 및 전망 등 다양한 정보를 수록했다.

정보기술 분야 필기시험 응시자 수는 5년(2020~2024년) 동안 연평균 8.0% 증가했다. 특히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종목은 연평균 26.4% 증가하며, 정보기술분야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개인 콘텐츠 제작·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미디어콘텐츠 제작 관련 지식과 기술을 다룬 자격에 대한 수요가

함께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해 정보처리기사 필기시험 응시인원은 6만6169명으로 최근 5년 내 최다 응시인원을 기록했다. 정보처리기사의 연평균 필기시험 응시인원 증가율은 11.2%로 정보기술 분야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이밖에 정보기술 분야 9개 종목 필기시험응시자 65.6%는 남성이었고, 연령은 20대가 64.5%로 가장 많았다. 경제활동 유형은 취업자(임금근로자) 37.9%, 학생 33.4%, 구직자(취업준비생 등) 21.1% 순이었다. 응시목적은 취업 39.4%, 자기개발 26.6%, 업무수행 능력향상 13.2% 순이다.

관련 종목별 상세 내용은 큐넷(www.q-ne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우영 공단 이사장은 “정보기술 분야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꾸준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공단은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발맞춰 정보기술 분야 인재 양성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근로복지공단, 안전경영대상 첫 시상

인천병원·진해어린이집 등 3곳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한 해 동안 안전보건경영 활동을 우수하게 수행한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25일 ‘제1회 안전경영대상’을 시상했다고 31일 밝혔다.

안전경영대상은 소속기관의 안전보건경영 실천 노력에 대한 성과 보상을 통해 공단 이용 고객과 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 제정해 올해 첫 시상했다.

첫 수상기관으로는 예방중심의 안전관리 추진 등 4개 분야의 위험성 평가 충실도 등 9개 지표에 대한 평가결과 종합점수가 가장 우수한 공단직영 인천병원, 진해어린이집, 제주지사가 선정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아울러 올해 5월 1일부터는 조직 개편을 통해 ‘안전윤리

경영본부’를 신설해 안전보건 활동을 한층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내·외부 고객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노사가 따로 없으므로 안전경영대상도 노사 대표가 공동으로 시상했다”며 “창립 30주년을 맞아 더욱 촘촘하고 세심한 안전 점검을 통해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안전한 공단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고용보험, 재할전문 직영병원과 공공직장어린이집 등 14가지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국 129개소 소속기관에서 1만명이 넘는 임직원이 근무하는 준정부기관 중 두 번째로 큰 기관이다.

특히, 6000여명의 환자가 매일 11곳의 공단 병원을 이용 중이며, 37개 직영 어린이집에서는 3300명의 어린이를 보육하고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국가핵심기술 유출시 벌금 ‘최대 65억’

산업부, 보호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무단 M&A 원상회복·과태료 부과
7월 22일 시행... 손배 최대 5배

앞으로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시 최대 65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을 정부 승인없이 인수·합병하면 조사 절차없이 산업부장관이 즉시 원상회복 등 조치 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 1000만원 이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4월 1일 ~ 5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보호체계를 대폭 개선하고, 위반시 벌칙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오는 7월 22일 개정 법률과 함께 시행된다.

산업기술보호법은 우리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 유출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수출통제와 기술 보호조치들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 산업기술 해외유출 건수는 2020년 17건에서 2024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년 23건으로 지속 증가 추세다. 지난해 해외로 유출된 산업기술 중 반도체 6건, 디스플레이 8건, 조선 4건, 자동차 2건 등 우리 주력 산업분야 기술이 다수 포함됐다.

이에 개정안은 기술 유출 우려가 크고 보호 필요성이 큰 경우 기업 신청 없이도 국가가 직권으로 기업에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받도록 국가핵심기술 보유확인제를 신설토록 했다.

또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시 기존 최대 15억원이던 벌금을 최대 65억원까지 확대하고, 처벌대상을 현행 목적법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해 유출된 기

술이 해외에서 사용될 것을 알기만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브로커의 경우에도 기술 침해행위로 처벌하도록 했으며,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한도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상향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같은 개정 산업기술보호법 시행에 맞춰 법률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 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국가가 직권으로 기업에 국가 핵심기술 판정을 신청하도록 하는 요건과 절차, 불법 해외인수·합병 등에 대한 중지·금지·원상회복 등 조치 명령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요건 등을 규정했다.

아울러, 한국산업기술기술평가위원을 ‘기술안보센터’로 지정해 국내외 기술동향을 파악하고, 기술평가 및 기술의 체계적 지정 등 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 발굴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법 시행 전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